

## I. 출장개요

1. 출장자: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원내 동반자 김지연 연구원)
2. 출장기간: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2009. 9.29 - 2009. 10.11)  
김지연 연구원 (2009. 10.4-2009.10.11)
3. 출장지: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 중국(베이징, 상해), 독일(프랑크푸르트), 루마니아(부쿠레슈티), 체코(프라하)  
김지연 연구원 - 독일(프랑크푸르트), 루마니아(부쿠레슈티), 체코(프라하)
4. 출장목적: 기본연구수행을 위한 현지조사

## II. 출장일정

날짜	행선지	활동사항
2009. 9. 29	서울-베이징	출국
2009. 9. 30	베이징	베이징대학 방문 면담, 칭화대학 방문
2009. 10. 1	베이징, 베이징-상하이	중국인민대학 방문, 사회과학원 방문 이동
2009. 10. 2	상해	상해 사회과학원 방문, 상해철도대학, 복단대학 방문
2009. 10. 3	상해-서울	귀국
2009. 10. 4.	독일(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도착 코트라 관계자 면담
2009. 10. 5	독일(프랑크푸르트)	피테 경제대학교 교수 면담 비엔나 경제대학교 교수 면담 프랑크푸르트 경제연구소 동유럽 체제전환 관계자 면담 (알바니아 정부 자문관 면담 포함)
2009. 10. 6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부쿠레슈티 이동 코트라 관계자 면담
2009. 10. 7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루마니아 국책경제연구소 방문 및 소장 면담 루마니아 경제대학교 방문 및 교수 면담 루마니아 재정부 자문관 사무소 방문 및 면담
2009. 10. 8	체코(프라하)	프라하 이동 코트라 관계자 면담
2009. 10. 9	체코(프라하)	FSP-CDF 기관 방문 및 기관장 면담 (전직 체코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 체코 프라하 국립경제대학 방문 및 교수 면담 체코 투자청 관계자 회의
2009. 10.10	프라하	프라하 국립대학교 도서관 자료 조사 프라하 출발
2009. 10. 11	인천	인천공항 도착

### III. 활동내용

#### 1. 중국

- 중국은 적극적 대외개방과 개혁으로 대외경제제약요인을 제거한 선도적 체제전환국가의 하나임.
  - 국가정책의 개혁, 개방화, 국민의 개혁지지와 참여, 제도의 구축을 통한 실질적 제약요인의 제거, 평화적 대외정책추구를 통한 외자유치의 추구, 경제특구를 통한 경험과 실적을 축적 및 파급효과의 극대화
- 중국의 학자들은 북한도 국가지도자의 개혁의지와 실질적 정책화, 제도개선을 통한 변화의 실증화, 경험적 단계, 즉 특구를 통한 실수의 최소화, 대외관계를 경제중심적 관계로 변화 등이 있어야 성공 할 수 있음을 지적
  - 특히, 북한과 같이 개혁초기단계의 국가들은 두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 하나는 대외적 이미지 개선-즉 평화적 이미지를 주는데 주력
  - 다른 하나는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특별한 장소 즉 특구를 잘 활용해야함.
  - 평화와 개방의 의지가 연동될 때, 자본이 들어감.
- 더 중요한 것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위험으로 간주하는 의식을 극복하는 것임.
  - 개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 지면 국민의 지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것임.
  - 문제는 개혁과 안정화의 조화이며 이를 위해선 국제적 협력이 필수
  - 북한과 같이 자본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개발도 안정화도 국제적 협력속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음.
- 사유화, 자유화, 안정화, 인프라구축의 우선대상과 단계를 잘 설정하고 동력이 될 만한 대상을 우선 선정하고 선택집중을 하는 것도 고려
- 다양한 대외경제제약요인 제거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보고서에 적절히 반영예정

#### 2. 독일

- 독일은 EU 국가 가운데 북한과 가장 활발한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국가 중 하나임

- 독일은 2006년 북한과 총 7,629만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여, EU 대북 교역액 가운데 32.6%를 차지함.
- 독일의 대표적인 대북투자 사례에는 △KCC 유럽 △베를린 여행사 △동아시아협회 평양사무소 개설 등이 있음.
  - KCC 유럽은 베를린 소재 컴퓨터 회사로, 북한 온라인 시장 선점을 위해 53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내나라'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개설함
  - 베를린 여행사는 2004년 10월, 북한 철도 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 독일 17개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동아시아협회는 평양에 컨설팅 사무소를 개설하고 대한 양국 기업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이 외, △농업·어업·가축사육 분야의 스텐더 AG, △화학, 섬유화학 및 제약 분야의 솔베이 파마슈티컬, △유관단체 및 재단 지원의 팔츠 상공회의소, △환경기술, 쓰레기처리, 재활용 분야의 하코 베르케 International GmbH, △연마물질, 석재가공, 유리, 기계 전기 분야의 유럽 테크닉 GmbH, △물류 분야의 쿠네-니켈사(社) 등이 대북투자에 관여한 경험이 있거나 실제 사업을 진행 중인 독일 기업들임.
- 독일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옴.
  - 독일의 대북지원은 대부분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성 지원의(Humanitarian Assistance) 성향을 지님.
  - 독일의 대북지원액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OECD를 통해 독일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2002년 460만 달러에서 2007년 960만 달러로 108.7% 증가세를 기록함.

<표 1> 공여국 별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지원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주	0.8	1.0	1.2	1.4	1.8	2.3
캐나다	1.7	1.9	2.4	2.8	2.7	3.7
프랑스	4.7	7.2	7.0	8.9	9.9	8.5
독일	4.6	5.6	6.1	9.2	9.5	9.6

- 독일은 대북 식량지원 분야에서도 주요 국가로 평가됨
  - 2007년 독일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규모는 4,169톤으로 이는 대북 식량지원국가들 가운데서 열 4위를 차지하는 비중임.

&lt;표 2&gt; 지원 국가별 대북 식량지원 실적(2007년)

(단위: 톤)

국가	지원량	국가	지원량
호주	8,766	한국	431,290
캐나다	1,375	네델란드	64
중국	292,121	영국	2,933
덴마크	240	독일	4,169
유럽공동체	1,726	기타	4,714

□ 세계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기업이 대북투자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갖는 조건은 △정치적 안정성, △투자의 안정성, △이익발생 가능성(내수시장 가능성), △저렴한 노동력 이용 가능성 △사회기반시설 구축 정도 등임.

- 북한은 투자의 안정성과 내수시장 확보 가능성, 사회기반시설 구축 정도에서 취약성을 지님.

○ 투자의 안정성과 내수시장 확보 가능성은 오늘날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고려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동독의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은 서독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

□ 독일 정부는 동독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부시책을 마련, 실행하고 있으나 동서독 경제력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

- 동서독 통일 이후 통일세를 신설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3% 세금을 부과하여 그 수입으로 동독지역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통일세는 동독지역의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구축과 용수시설 마련, 전기·에너지 확보 등을 위해 사용됨.

-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구)동독 주민들의 심각한 실업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수당 제도를 마련하여 실업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해줌.

○ 그러나 (구)동독 주민들의 실업률은 연평균 15~17%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동서독 주민들 간의 교육·훈련차이, 즉 업무능력에 대한 차이 때문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동독 주민들의 국가에 의존하는 태도(계획경제제도 습성)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조인은 두 가지로 정리됨.
  - 한국정부는 직접적인 대북지원 대신 기업들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대북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임.
  -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교역, 투자규모는 확대될 것이고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한국정부는 독일사례를 비추어 대북지원 사업을 전개할 시 교육도 함께 병행할 것을 권장함
    - 의식의 변화없는 지원은 매우 제한되고 단기적 차원의 효과를 가져옴
    - 꾸준한 교육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임

### 3. 루마니아

- 루마니아는 내부적 및 외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면서 1993년부터 체제전환을 시도함.
  - 루마니아는 공산체제 붕괴 이후 구조적인 정치 불안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사회당의 Nasetase 총리가 집권하면서 정국이 안정화되기 시작함.
    - 1989년 공산체제 붕괴이후 동국은 좌파, 우파, 민주주의계열, 소수 헝가리계 등 다수의 정파가 난립하여 왔음
    - 이런 정치적 환경은 단일정파가 주도하는 정부구성이나 안정적이고 일관된 개혁정책이 추진되는데 한계를 갖게 함.
    - 사회당의 Nasetase 총리가 집권한 이후 루마니아는 나토 및 유럽연합에 가입하였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편입되기 시작함.
  - 1990년 27%까지 하락한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1993년 16%까지 급속히 상승함.
    -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이전까지 루마니아의 교역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외국인투자 및 외자유치, 국제기구로부터의 공적 개발자금 도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음.
    - ▶ 루마니아는 농업 등 1차 산업이 GDP의 15%(2001년 기준)를 차지하는 낙후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 한편 체제전환이 시작된 1989년 GDP의 57%를 차지했던 제조업은 2001년 34.6%로 낮아졌으나, 주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도 함께 정체됨.
- 체제전환을 시작한 이후 루마니아는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차관형식의 공적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본격적인 경제개발 사업들을 추진함
- 루마니아는 체제전환이후 되풀이된 정치, 사회불안, 민영화,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관료, 국영기업 관리자, 노조 등 각종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주변국들에 비해 경제개혁 추진 성과가 매우 낮았음
  - 개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은 체제전환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음
  - 루마니아는 체제붕괴 이후 확대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외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경험함
- 1990년대 초에는 국제금융기구에 의지하여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였으나, 1995년 이후 직접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96년 12.7억 달러, 1997년 9.8억 달러 등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함
- 그러나 국내정치 불안과 미흡한 구조조정 성과,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등의 문제가 겹쳐 1999년에는 해외조달이 막히게 되었고 이는 루마니아로 하여금 심각한 외채상환 문제를 경험하게 함
- 루마니아는 2차 경제침체를 경험하면서 성장률이 12%나 하락하였으나 IMF로부터의 금융지원, 긴축재정 정책 실시, 경제회복을 위해 IMF로부터 6차례 이상 전문컨설팅 지원을 받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00년부터 연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함
  - 1999년 -1.7%를 기록하던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1.7%, 2001년 5.3%, 2002년 4.9%, 2003년 4.8%의 성장세를 유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긴축재정을 통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는데, 1999년 45.8%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 45.7%, 2001년 34.5%, 2002년 22.5%, 2003년 16%를 기록하며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함.

#### 4. 체코

-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체제전환 프로그램은 안정화 프로그램 및 민영화 프로그램으로 대별됨.
  - 안정화 프로그램은 충격요법에 의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금융긴축, 재정정책 등으로 나타남.

- 민영화 프로그램은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국가가 몰수한 개인소유의 기업, 농장 등을 본래 소유주에게 되돌려준다는 내용을 중점과제로 둠.
- 민영화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민영화성(省)과 국가자산기금 등의 민영화기관을 설립함.
  - ▶ 민영화성의 주요업무는 기업의 민영화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에 따라 제출된 민영화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한편, 민영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이 포함됨.
  - ▶ 국가자산기금은 민영화되지 않았거나 향후 국영기업으로 남아있게 될 기업의 운영을 담당하며 이들의 구조조정을 실시함.
- 급진개혁파는 국영기업의 존재를 개혁을 지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단기간에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체코슬로바키아가 급진적인 경제개혁 노선을 채택·지속하게 영향을 미친 원인가운데 하나는 당시 국제사회에 편만했던 경제발전 논리·기조임.
  - 당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및 경제학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은 급진적인 경제개혁이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큰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충격요법에 따른 경제손실 규모는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 불황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사회주의 시대에 군수산업을 비롯한 중공업 설비가 집중되었던 슬로바키아가 체코에 비해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전환불황이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화 경향강화로 연결되어짐.
  - 전환불황이 심해짐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정당분열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 해체로 이어짐.
- 체코는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가 1991년부터 실시한 쿠폰 민영화 정책을 계승,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개경매 방식의 민영화 정책, 사유재산 반환 정책 등을 함께 실시함.
- 쿠폰 민영화 방식은 성인 국민에게 당시 노동자의 1주일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저가격으로 주식구입 권리증을 판매하고, 구입자는 자신이 가지는 권리증의 포인트 범위 안에서 민영화 대상 기업 가운데 희망하는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쿠폰 민영화는 민영화 대상 기업의 자산 가치에 비해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 민영화가 지연되는 체제전환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임.

- 1991년에 실시된 제1차 쿠폰 민영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영화된 기업의 장기적 발전보다 주식 거래에 의한 이익 추구행위를 성행하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킴.
  - ▶ 국민들은 배정받은 쿠폰을 민영화투자펀드(IPF) 산하의 주요 투자 그룹에 매매각 혹은 위탁하여 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추구를 활성화시킴.
  - ▶ 연방 분리 이후 체코는 꾸준히 쿠폰 민영화 정책을 발전시킨 반면, 투자그룹 행위에 불만을 가진 슬로바키아 정부는 제2차 쿠폰 민영화 정책을 중단함.
- 쿠폰 민영화 정책 이외에도 체코는 스코다 자동차를 폭스바겐에 매각하는 등의 공개경매 방식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음.
  - 스코다 자동차는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로 평가되는데, 성공을 유도한 주요 요인은 크게 △체코정부의 스코다 자동차사의 채무탕감(7만 크라운) △폭스바겐에 경영권 위임 △세금감면 및 고정환율 혜택 △투자이후 5년간 투자원금보장 제도(손실금 정부보장 제도) △체코 정부의 통신시설 구축 지원 △체코 지방정부의 근로자 임금의 일부 지원 정책 등으로 분석됨.
- 또한 체코는 사회주의체제 도입 과정에서 몰수한 개인소유물·개인재산을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정책도 실시함.
- 체코는 민영화 정책 이외에도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 및 경제자유화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함.
  - 체코의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1991년 연 57%를 기록했던 체코의 물가상승률은 이후 연 10% 수준으로 안정되었고, 정부재정도 균형 상태를 회복함.
  -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은 경제체제전환 초기 코메콘 붕괴로 인한 수출시장 상실 등 국내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체코는 무역자유화 및 50% 수준에 이르는 통화가치 절하 정책을 실행하면서 무역구조를 서방 선진국들과의 교역구조로 전환하고, 제조업 생산을 활성화시켰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발전시킴.
  - 이러한 체코의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및 경제자유화 활성화 정책은 1993년을 기점으로 체코경제가 회복단계로 접어들게 함.
- 무역적자의 급증과 코로나화의 평가절상 정책은 체코로 하여금 외환위기를 당면하게 함.
  - 1995년 5.9%, 1996년 4.3%에 이르렀던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수입증가 및 국내소비 급증

을 원인으로 무역적자 폭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되어 1997년 체코는 외환위기를 당면하게 됨.

○ 체코의 무역적자는 급속히 증대되었음

▶ 1996년 56억 달러(GDP의 12%)에 달하던 체코의 무역적자는 1997년 1/4분기에만 GDP의 12%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함.

- 체코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을 위해 코르나화를 절상하였음.

▶ 그러나 코르나화의 절상정책은 국제시장에서 체코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킴.

▶ 외국인 투자자들은 체코 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1997년 4월 코르나화 가치는 급락하였음.

□ 체코 정부는 1997년 4월 통화위기 극복방안으로 세출삭감, 공무원 임금동결, 기업의 임금인상 억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제한, 관리변동환율제 등의 정책을 발표함.

- 체코의 안정화 정책은 무역적자를 완화시킴으로 체코경제가 회복단계로 진입하게 영향을 미침.

○ 1997년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6.1% 감소하였고, 긴축정책에 의해 임금상승 추이도 안정세로 돌아서게 됨.